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혜택인가, 통제인가?

김상진* · 김찬선**

요 약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 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를 크게 부각시키며 파놉티즘(panoptisme) 현상을 더욱 일반화 시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으로 위장한 광고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따른 감시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사회의 일반화를 경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study about social issues according to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 benefit, controlled society?

Sang-Jin Kim* · Chan-Sun Kim**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higher CCTV, hidden Camera, and surveillance and contra-surveillance in Cyber-space are, the higher the voices of concern about surveillance society nationally are. Nevertheless, phenomenon of panoptisme is becoming into general use. Actually, this watching system should be on the rise but this is the output playing up and advertising the positive effect of immediate convenience and offering safety that government and business made. Thus, this study wants to offer implication to warn the invasion of privacy and generalization controlled society as pointed out cause and problem of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according to the digital era.

Key words : CCTV, panoptisme, panopticon, surveillance society, Cyber-space

접수일(2014년 3월 12일), 수정일(1차: 2014년 3월 16일),
게재확정일(2014년 3월 17일)

* 용인대학교 항공보안학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시큐리티경영학과

1. 서 론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통제를 의미하며, 통제는 곧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연계되어진다. 이 때문에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유관의 감시와 보고체계를 통하여 조직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사회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조지오웰의 『1984년』라는 소설에서 이와 같은 감시시스템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서 빅 브라더(big brother)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 독재 권력의 정치적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당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사상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과 행동을 속박하고 인간의 기본욕구까지도 통제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단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허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와 『1984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허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중심이 되는 주제는 ‘감시사회의 도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CCTV, 스마트 폰, 자동차의 블랙박스, 크레딧 카드 등의 활용이 집단에 의한 개인 감시뿐만 아니라 개인에서 개인 간의 감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영·미권처럼 사생활에 대한 의식이 강한 나라들은 이미 ‘감시 연구(surveillance studies)’라는 연구 분과를 설립했을 정도로 ‘감시’라는 주제를 놓고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감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감시’가 ‘안전(safety)’이라는 혜택을 동반하는 관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타협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감시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의 전직 CIA요원이었던 스노든은 미국국가안보국(NSA)에서 개인 휴대폰 해킹을 통해 전 국민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수집의혹에 대하여 NSA의 알렉산더 국장은 “이는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색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간인 감시용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였다. 물론 답변의 내용만으로는 진실여부 확인은 어렵지만 내용상 직접적으로 언급만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스노든이 언급한 감시체계의 기술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2013년 3월 미국에서는 일명 ‘오바마 케어법’이라 불리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생체칩이라는 ‘베리칩(veri chip) 또는 긍정의 칩(positive chip)을 신체 일부에 이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반려동물에 ‘생체칩 이식제도’를 도입 한 실정이지만, 이 생체칩은 겉으로는 의료 케어, 편리한 결제수단, 스마트한 환경 등을 제공해준다는 편리성과 실효성을 앞세워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및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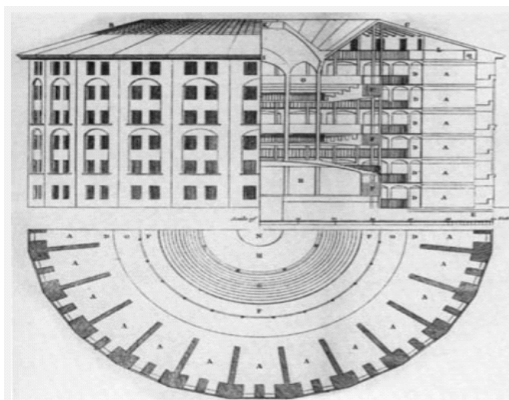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는,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정보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감시사회의 도래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전체주의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사회 시스템의 적용은 결국 통제사회로 연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는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타인과의 공유물로 여겨져 그에 따른 피해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감시사회의 도래 그리고 이러한 통제사회시스템의 반응과 변화에 대한 이슈를 고찰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파놉티콘(panopticon) 감시체제

파놉티콘(Panopticon: 한눈에 전체를 다 본다)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컴퓨터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 또는 침해하는 대상으로 비유하여 사용한 말이다.[4] 파놉티콘은 1791년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개념으로 학교·공장·병원·감옥 등에서 한 사람에 의한 감시체제를 뜻한다. 미셸푸코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파놉티콘이 죄수들을 감시하듯이 출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중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파놉티콘은 정보 기술로 구축된 감시체제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파놉티콘 장치는 ‘바라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이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벤담의 설명은 [그림 1]과 같다.[4] 이러한 건축설계는 ‘수감자는 항상 자신이 감시받는다고 스스로를 감시하며 자기 통제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나타낸다.



(그림 1) 일방 감시시설의 설계도

2.2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시큐리티의 양면성

2011년 1월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 명 개인정보 유출, 2011년 7월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2년 6월 코웨이 정수기, 비데 등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198만 명의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사건 발생, 같은 해 7월 KT 휴대폰 가입자 873만 명의 가입자를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건 발생,[9] 2013년 12월에 SC은행·씨티은행에서도 고객 정보 13만건이 대부업자들의 손에 유출된 사건 발생, 2014년 1월에는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사에서 고객 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2013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10]

오늘날의 인터넷·디지털 시대의 조합은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극단의 양면성이 상존한다. 이에 대하여 볼프강 조프스키(2007)는 “자유의 축소에 비례해 위험도 줄어든다면 균형을 갖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온갖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확보되지 않고 자유만 파괴된다면, 그 대차대조표는 적자다.” 라고 하면서 감시사회의 조건이 과연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해택인지, 통제인지? 에 대한 명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또한, 데이비드 라이언(2011)도 미국은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활용하여 민간인의 감시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유를 반납하는 대신 안전을 위해 감시를 자처하고 있다”며 최첨단 디지털 감시체제를 비난하였다.[2]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의 감시체제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개인의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으며, 개인들도 다소 개운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노출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지나치고 있다.

3. 감시사회의 원인과 실태

3.1 감시사회의 원인: 인식부재

사람은 저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자신이 믿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침해하려 하면 진실성이라는 잣대는 일단 쳐쳐두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반사적으로 수호하려 한다. 이러한 성향은 디지털 시대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 많은 유혹거리로 제공되게 되는데, 디지털기술의 아름다움에 취한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가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문제 거리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바로 편리함 때문이다.

이러한 안일한 인식의 부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유출 심화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해지고, 新디지털 감시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둘째, 정보의 맹목적 신뢰로 인해 인포데믹스(Infodemics)의 가열화¹⁾ 및 디지털 포플리즘 선동(사이버 공론장, 조작된 민주주의 온상), 셋째, 관계 불균형 초래로 인한 소셜미디어 중독(보이지 않게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중독)의 증가, 新소외문제 발생(소셜환경의 디지털 격차가 만드는 새로운 소외) 등이 있다.[6]

3.2 감시사회의 실태: 통제수단

3.2.1 CCTV

CCTV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국가마다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내에 설치된 CCTV의 개수는 약 429만 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하루 평균 83차례, 거리에 나가면 9초에 1번씩 CCTV에 찍히고,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는 50여 차례, 백화점에서는 3시간

당 45차례에 걸쳐 CCTV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블랙 박스에 설치된 카메라까지 포함한다면, 노출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CCTV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감시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탁월한 도구일까? 1999년 <스코틀랜드범죄학센터>는 범죄를 줄여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CCTV의 약속은 ‘과장’이라고 결론지었고, 2002년 <범죄자사회복지협회>는 CCTV를 설치한 24개 도시 중 단지 13곳에서만 범죄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환경조건개선을 통한 범죄예방(CPTED)과 비교했을 때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2008년 열린 보안 문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영국의 어느 경감은 CCTV 시스템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인트그레이PointGrey”에서 만든 “센시스3D 사람 추적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며 감시뿐 아니라 고객 정보 수집활동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CCTV를 개발하여 공공장소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감시 사업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3.2.2 RFID 칩

RFID²⁾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IBM’이 미국에 제출한 특허 출원서(특허 번호 20020116274)에는 그들의 개발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의류 산업 같은 성업 분야에서 RFID를 널리 사용한다면 사람, 동물, 사물을 막론하고 지구 전역에 있는 모든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조지오웰의 소설에 등장하는 수준의 사생활 침해가 나타날 것이다.”[3]

1)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일컫는 용어로서,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이 IT기구나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함.

2) 소형칩 형태로 제작되는 RFID라는 무선 주파수 식별기에는 고유의 식별 정보가 담겨 있어 RFID를 장착한 물건이나 RFID가 이식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소형칩이기 때문에 의류, 화물, 가방 등 어디에나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상점의 경우에는 RFID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식별해 추적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IBM은 향후 5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의 오감을 인식, 이를 정보로 저장 및 활용하는 단계로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7]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2013년 3월부터 RFID 바이오칩을 정보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의 몸에 이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몸에 생체 칩 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칩은 개인과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저장되어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RFID에 대한 보안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 모든 여권에 RFID 칩을 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미 RFID 칩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주로 서점의 책이나, 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에 모두 부착되어 있어서 개인의 독서 취미, 구입목록, 이동경로 등이 모두 노출되어 있다.

3.2.3 스마트폰

스마트폰에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위치가 정보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간단한 프로그램(앱App)을 이용하면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도청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을 응용하여 시판된 '구글라스'의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할 수 있어서 개인 간의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수위가 날로 높아 질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DNA정보의 남용, 전국민 지문의 전산화, 얼굴이나 다른 신체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아주 높다.

3.2.4 기타

전 세계의 하루 평균 이메일의 사용 양은 1,440억 개, 트윗은 하루 평균 1억 7,500만 개, 페이스북은 하루 평균 25억 개 등의 콘텐츠 공유하고 있다.[8] 이러한 콘텐츠의 공유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은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까지도 공유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인터넷

해킹을 하지 않고도 단지 유명한 포털사이트나 SNS, 페이스북, 트윗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물론 해킹을 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알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공유하면 상대방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한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제 감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엔은 2015년까지 가난한 국가의 디지털 보급률을 부유한 국가의 절반까지 끌어올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11]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공지능을 통하여 빠른 와이파이(wifi)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의 도래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놉티즘(panoptisme) 현상은 갈수록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감시체제는 전 지구적인 사회적 이슈거리로 대두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대인들은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에 마음을 빼앗겼고, 정부나 기업은 사람들에게 진보하는 시대적 산물이자 특혜라는 이미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쇠뇌 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열세 자리 주민등록번호 즉, 기록통합(record integration)³⁾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전자감시로 부터 가장 노출이 심각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를 극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감시 및 통제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3) 전자감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조직이 사회구성원의 표준식별번호(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로 성별이나 출신지명 등 동명이인의 혼동으로 부터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지만 늘 좋은 것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디지털 전체주의’라는 점에서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 간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이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그에 따른 행정적인 대안은 구비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 시민단체,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방적인 통제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1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각종 피해를 통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보보호권 및 정보소통권⁴⁾의 권리를 정당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4.2 제언

감시사회는 영화⁵⁾에서나 등장할 법 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드러나 교묘하게 일반화 시키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봤던 영화가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영화를 통해서 미래사회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대단함에 다시 한 번 놀라면서 과학이라는 종교에 찬사를 던지면서 말이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기술의 진보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시사회의 결국은 디지털 전체주의를 등장시킬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IT산업의 강국으로써 21세기는 융합보안의 기술력을 증대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그에 따른 디지털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자유를 박탈할 소지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로 대안의 제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영삼(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p.302.
- [2] 데이비드 라이언(2011), ‘9.11 사건 이후의 감시’, 울력출판사.
- [3] 로빈터치(2013), ‘감시사회’, 이후출판사, pp.146-148.
- [4] 미셀푸코(1975),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오생근역, pp.303~311.
- [5] 볼프강 조프스키(2007), ‘안전의 원칙: 위험사회, 자유나 안전이나’, 푸른숲출판사, p.226.
- [6] 한국사회과학협의회·중앙SUNDAY 저(2012), ‘한국사회대논쟁’, 서울: 메디치미디어, p.282.
- [7] 한국경제 2013. 11. 27.
- [8] SBS스페셜 감시사회. 2013년 9월 8일 방영.
- [9] <http://www.bloter.net/archives/173516>
- [10] <http://www.opengirok.or.kr/3729>
- [11] www.itu.int/wsis/index.html

4) 정보보호권: 생산한 정보를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및 심리정보와 같은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사용되어지는 차원, 정보소통권: 자신의 정보 및 타인의 정보를 정당한 목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말함.[1]

5) 영화: 가타카(앤드루 니콜, 1998),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토니 스큷, 1998), 트루먼 쇼(피터 위어, 1998), 마이네리티리포트(스티븐 스피버그, 2002), 엘리시움(2013) 등.

————— [저 자 소 개] —————



김 상 진 (Sang-Jin Kim)

2001년 2월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체육학사)
2003년 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석사)
2008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email : ksj8004@naver.com



김 찬 선 (Chan-Sum Kim)

1998년 2월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학사)
2003년 7월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학석사)
2009년 2월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경호안전학박사)
2011년 3월~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
학교 융합산업학과 시큐리티융합경영
전공 교수

email : atom7942@hanmail.net